

# '추미애 정국' 이번주 분수령

추 법무, SNS에 사과 입장... 오늘·17일 대정부질문 출석

여야, 16일 국방장관·18일 합참의장 후보 인사청문회 격돌 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사과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가운데 이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며 아들 서모(27)씨의 특혜 휴가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 왔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라며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다. 검찰은 누구도 의심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7일 '법무부 수사관개혁 시행 준비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함께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고받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 이외에는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추 장관이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서씨의 특혜 휴가 문제는 이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번 주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중 첫날인 14일(정치 분야)과 마지막 날인 17일(교육·사회·문화 분야) 출

석할 예정이다. 16일과 18일 각각 열리는 서육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도 사실상 '추미애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국방부에서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처리 과정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거듭되는 문제 제기는 정쟁에 불과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한 최고위 관계자는 "대정부질문에서 대응을 잘하면 논란이 수그러들 것으로 본다"며 "팩트가 없는 의혹인데, 그렇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뜻이다.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하고, 기록도 남아있는데 뭐가 문제인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칫 여론이 악화하면 지난해 '조국 사태' 때처럼 국정감사 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당 직자는 "당 전체적으로 추 장관을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는 맞다"면서도 "국회에서

추 장관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국민 정서를 고려해 자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14일 대정부질문 저격수로 윤사 출신 박형수·전주혜, 경찰 출신 윤재욱, 행정 관료 출신 박수영 의원 등을 내세우며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나라는 도탄에 빠졌는데, 조국에 이어 추미애에 구하기엔 온 정부 여당이 매달리고 있나"라며 "당 전원이 나서 추 장관의 거짓말에 지친 국민들의 분노를 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서 후보자가 임명 직전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만큼 육군의 원칙과 규정에 대해 따져 물을 계획"이라며 "특히 공익 제보자가 과연 '법범식'인지 장관이 될 사람이 확실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무게 추 기우는 '공수처법 개정'

여야 협상 지지부진... 민주당, 이번주 초 추가 개정안 공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건넨 '공수처·특별감찰관 동시 논의' 카드가 사실상 거부당했다고 판단, 더는 참기 어렵다는 강경론에 급속도로 기울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3일 "야당이 시간을 끄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인내심이 한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수처 출범과 동시에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통 큰 양보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타협안을 일축했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권력형 비리가 연달아 불거지지 않았나"라며 "이제라도 특별감찰관을 세워 대통령 측근 비리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궁극적 목표가 공수처 출범 저지다. 따라서 "자꾸 조건을 붙이고

시간을 끈다"는 여당 공세에 "정권 비호 수단인 공수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버틸 태세다.

수면 아래서 벌어지는 수싸움도 뜨겁다. 민주당은 박법계·김용민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고,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이번 주 초 추가 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주로 야당을 배제하고 공수처를 조기 출범시키겠다는 내용들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 개정 움직임에 아직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다. 여론을 의식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스타일,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의 후폭풍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법 개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혹에서 여론의 시선을 돌리고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

# 4차 추경 '통신비·돌봄비용' 최대 쟁점

야권, 통신비 지급 반대  
김경수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이재명 "효과 없다" 여론서도 반대  
유·초등 돌봄비 지원도 분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 의원실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편성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목표 시한인 18일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씩 지급하는 통신비와 만 7세 이하 아동으로 한정하다 이번에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돌봄비용 지원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4차 추경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 4600만명에게 지급하는 통신비 2만원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9300억원의 재원을 배정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사업을 바로잡겠다고 예고했고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론도 찬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대신 차라리 전 국민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특히 여권내에서도 통신비 2만원을 둘러싸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승수효과가 없다"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와이파이 망 확대사업에 투자하자"는 등의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당정은 3차 추경안에서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우선 고위험군 1600만명부터 하기 위한 1976억원을 반영한 바 있으며, 야당 제안에 대해서도 '백신 생산물량 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코로나19 학교, 어린이집이 쉬거나 원격수업을 하면서 돌봄 비용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인당 양육비 20만원씩을 현금 지원하기로 한 점도 논란거리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등 총 532만명에 대해 20만원씩 총 1조1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야당에서는 여당 요구로 막판에 추가된 '초등생 이하 아동 특별돌봄지원비 지급'이 현금 뿌리기식 정책으로 부적절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초등학생까지로 지원 대상이 정해지자 중·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신들에게는 아무 지원이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4차 추경안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조원 대를 배정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재회망자금' 100만~200만원 지원 사업에 대

해서는 야당도 취지에 동의하고 있어 대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안 발표 이후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이 정부가 제시한 선별 기준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지정한 '집합금지업종'에 속해 똑같이 영업 제한 조치를 적용받아놓고도 이번 지원 대상에서 '유충주점'과 '콜라텍'만 제외된 점도 논란거리다. /오광록 기자 kroh@

# 전남 주민 15명에 21대 총선 첫 과태료

음식·교통 편의 받아... 1인 최대 78만원 등 총 1000만원

지난 총선에서 후보자 측으로부터 음식·교통 편의를 받은 주민들이 1인당 최고 78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지난 21대 총선에서 A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받은 선거구민 15명에게 1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15명의 주민이 제공받은 음식·교통편의는 35만원 상당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1067만 7300원이다. 1인당 적게는 48만원, 많게는 7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21대 총선과 관련해 전남지역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적발된 15명의 주민은 총선 석 달 전인 지난 1월 A 후보자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서 후보자 측으로부터 3만원 안팎의 교통편의·음식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선관위는 출판기념회 참석자 모집, 교통편의·음식물 제공 등을 주도한 A 후보자 측근을 지난 2일 검찰에 고발했으며, A 후보자는 총선에 낙선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여의도 브리핑

# 조오섭, 재난시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복구갑) 국회의원은 13일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보호하는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세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안정보호기간에는 3기에 달하는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아니면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 임대차 계약은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코

로나19 대책이 공공임대주택에만 일부 지원되던 문제를 개선해 민간임대주택에도 적용시켜 전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열정  
꿈  
진리로 증명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 악 학 부	23	6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b>총 계</b>		<b>93</b>	<b>29</b>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0. 9. 23(수) ~ 28(월)  
· 전형 일: 2020. 10. 12(월)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형 일: 2021. 1. 18(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으로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